

“해남을 대한민국 AI 심장으로 육성하겠다”

전남도, 해남군 정책비전투어

‘RE100 산단’ 구축 등 10대 비전 제시 김지사 “인구 50만 AI에너지도시로”

해남을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심장으로 육성, 국내 최초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 단지 조성을 통해 농생명 혁신 거점으로 키우는 미래 발전 비전이 제시됐다.

전남도는 20일 오후 3시 해남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영록 지사, 명현관 해남군수, 김성일·박성재 전남도의원, 이성욱 해남군의회 의장, 청년, 군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군 정책 비전투어’를 개최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환영사에서 “전남은 소외된 땅이 아닌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 되고 있으며 K관광을 선도하고 미래 농축수산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장의 땅이 되고 있다”며 “AI, 에너지, 농업, 문화가 어우러지는 대한민국 농어촌 해남의 비전에 김영록 지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AI-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오픈AI와 SK그룹의 글로벌



20일 해남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남군 정책비전투어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AI 데이터센터와 삼성그룹의 2조5천억원 규모 국가AI컴퓨팅센터, LS전선의 국내 최초 해상 풍력 전용항만이 전남 구축을 결정했다”며 “전남도와 해남군이 수년 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해남을 인구 50만명의 전남 AI에너지

미래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남연구원은 ‘AI·농업·문화·에너지의 미래 혁신을 견인하는 대한민국 ACE 해남’ 슬로건으로 ▲AI 혁신거점 솔라시도 ▲대한민국 RE100 산단 조성 ▲인구 10만의 AI-에너지 미래도시

조성 ▲글로벌 해상풍력 핵심 전진기지 구축 ▲기후·스마트 농생명 혁신 거점 ▲인프라 구축·첨단 기술 접목으로 미래 수산업 선도 ▲5책 5관 관광활성화 ▲서남해안 명품 생태정원 벨트 ▲서남권 대표 스포츠 친화도시 조성 ▲사통팔달

교통망 기초인프라 확충 등 10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진 정책 토론에서는 해남군민, 김영록 지사, 전남도 실·국장들 간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송영석 땅끝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여건을 위해 유휴 시설을 농업근로자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비 1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송우중 옥천면 이장단장은 “옥천면의 전남 과수연구소가 삼산면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부지를 유통물류센터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주민 정민호씨는 구성항을 법정항인 지방어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농업근로자 숙소 사업 신청 시 예산 지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재정으로 1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또 “5년여가 걸리는 전남과수연구소 완전 이전 후 부지 활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해수부와 협의해 구성항의 지방어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마산-산이 간 지방도 확·포장 조기 완공, 공공산후조리원 국비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건의가 이어졌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의회, 전국 첫 ‘통합돌봄 조례’ 전면 개정

박미정 의원 대표발의...원안 통과
국가 표준모델 시행 맞춰 체계 정비
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 대폭 확대



통합돌봄 체계를 국가 표준모델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게 됐다.

해당 조례는 서울·부산 등 전국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했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광주를 찾아

진)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광주는 그동안 선도적으로 구축해 온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을 확인한 선도 사례로도 주목받은 바 있다.

개정안에는 2028년 3월 시행 예정인 상위법과 용어·체계를 맞추고 통합돌봄 범위를 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돌봄 전달 체계와 협의체 구성 등 위임 사항을 구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명도 기존 ‘통합돌봄 지원 조례’에서 ‘돌봄 통합지원 조례’로 변경되며 연간 통합지원 지역 계획을 사회보장·보건으로 계획과 연계하

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통합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위원회를 ‘돌봄 통합지원협의체’로 개편해 위원 정수를 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상위법의 원칙인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건강하게 생활’이라는 취지를 조례 목적에 반영해 지역밀착형 돌봄 철학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 통합돌봄은 이미 전국이 배우는 선도모델로 자리 잡았다”며 “법 시행에 맞춰 조례를 재정비함으로써 광주의 공공·재가 기반 통합돌봄 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전남도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 확대

전남도는 20일 “도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가치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를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을 지속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은 전남도가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천950필지를 변경해 토지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했다.

기존에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이 어렵고 농지 전용허가 등 토지 형질 변경에 제약이 있어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에 불편함이 컸다.

전남도는 항공사진이나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했으나 주소변경이나 토지 소유자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 반상회보나 언론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처리하고 등기를 완료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극 행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사·군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재정 기자

이개호 “퀀제누비아 사고, 안전체계 점검을”

운항 매뉴얼 준수·장비시스템 확인 촉구

여객선 ‘퀀제누비아 2호’가 무인도와 충돌해 좌초한 사고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은 20일 “267

명 전원 구조는 다행이지만 항로 이탈과 관제 부재가 동시에 나타난 만큼 해상 안전 체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백명을 태운 여객선이 정해진 항로를 벗어났는데도 항해사와 해상교통관제



(VTS) 모두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로 이탈을 왜 인지하지 못했는지, 충돌 직전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세월호 때도 변침(항로를 바꾸는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는데 이번

에도 변침 지연이 거론되고 있다”며 “운항 매뉴얼 준수 여부, 항해 장비와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초동 대처의 적절성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즉각 합동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고마다 대책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인재(人災)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수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노인이 있는 곳이 곧 노인보호구역입니다

교통사고보행 사망자중 62%가 고령 보행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없는 도로에서도
어르신이 보인다면 각별히 주의하고 배려해주세요

CMYK